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첫 재판 출석 자신의 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 “예비후보 시절 선거 캠프 내 거짓응답 권유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 없다” 등 해명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59·무소속·전주시을)이 3차 공판 만에 처음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회 예결위 일정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지난 1, 2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받고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측근 A씨 등 10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 낭독을 통해 이 의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공모해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15만8000여 명에게 전송하고 이를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측근과 함께 전동주와 책자 등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했으며, 당내 경선이 제한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명함도 배부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설명하고,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8만여부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상직 예비후보자 선거 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이 없고, 이상직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진공 이사장 시절 이상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성이 없고, 전동주와 책자 기부 행위 부분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인터넷 방송에서는 20대 총선 공천에 탈락한 경위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종교시설 내 이뤄진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 종교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주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 부분도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소명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법률에 문외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자에게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동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스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지난 27일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 의원이 법정에서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행정지원 민주시민교육 효과적인 시행 가능해져

민주 한병도 의원
지원 법안 대표발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민주시민교육원과 지방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효율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해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업무 지원을 위한 기구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각 시·도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교육기관 지원과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한계가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안이 제정되면 민주시민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정착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

“청년 농업인에게 도움 되는 사업 추진을”

농산경위, 농업기술원 예산·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27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농업기술원 2021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2억 8,921만 원보다 13억 2,267만 원이 감소된 229억 6,653만 원 규모로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0억 6,273만 원보다 4억 1,930만 원이 감소된 516억 4,342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스타 청년 농업인 CEO 육성 사업에서 사업목적은 ‘청년 농업인 대상 경영, 마케팅 능력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영농 정착 및 차세대 농업 리더 양성’으로 돼 있는데 편성된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행사운영 관련 예산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적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청년 농업인 CEO 육성과 관련된 교육 예산도 편성해 청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최후열 의원(부안)은 “농식품 가공소재 연구에 있어 같은 품목이라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배된 품종이 가진 기능을 특화할 수 있는 가공기술개발로 농가소득원을 다양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정주9)은 “기후 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소득작목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 전북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무리한 연수 부적절”

익산교육지원청서 강행해 ‘빈축’... 강용구 도의원 “돈 쓰기 연수 아니냐?” 지적
기초학력 향상 취지로 추진되는 ‘두리교사제’ 교사 정원 확보 방안 활용 우려도

최근 전북도내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익산교육지원청이 지난 27일 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연수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4개월 연속 연수를 진행해 코로나19 예방 행정의 부적절함을 보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날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2020년 익산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연수에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해 연수를 진행했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 이와같은 연수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강사섭외와 장소 선정이 다소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계획된 연수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북도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에도 연수를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수 자체도 반드시 익산시민과 도민 등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용구 의원은 “연말이라 이미 편성해 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돈 쓰기 연수’가 아니냐”면서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이 심각해지는 비상시국임에도 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쓴소리를 냈다.

한편, 강용구 의원은 지난 25일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두리교사제’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도와 향상을 위한 방안보다 학력인구 감소 시대에 교사 정원 확보 방안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은 “두리교사제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시범 사업을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2021년도 대상학교를 17개로 급격하게 확대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정규교사의 정원확보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용구 의원은 “학력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교육예산 역시 불경기 여파로 내국세가 감소로 전북교육청의 대부분의 재정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교사 정원 유지와 확대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 27일, 농수산물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격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해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거래물량과 가격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